

청년실업률 바닥 치고 설비투자 감소 등 ‘어닝쇼크’ 에도 “나의 사전에 양보란 없다” 귀족 노조의 마이웨이

(금융·공무원 노조)

실패의 경제

렌트싱킹과 집단이기

(시대추구)

(2)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금융·공무원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악을 달리는 청년실업률에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를 외친다는 설명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2012년 7.5%였던 실업률은 2014년 9%대로 경중 뛰었다. 이후 8~9%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9.2%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아지고 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소비의 개선 흐름은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비투자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도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다른 세상’을 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총파업 예고…“힘대힘” 으름장



현대차 노조가 12일 부분 파업을 벌이고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노조, 4.7% 임금인상 요구
사측, 1.7% 제시에 ‘협상 난항’

매출4%·영업익 45% 감소에도
현대자동차 노조, 부분파업 강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11일 제5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 조합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은행이 전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3%와 물가상승률 1.7%를 더해 4.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63세로 정년 연장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조기 시행(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채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참여 보장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2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스터리쇼핑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1.7% 임금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지난 12일 ‘투쟁속보’를 통해 “이제 우리는 힘 대 힘의 대결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판매 부진과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자동차와 조선 업계에서도 노사 분규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이후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1일자 ‘임투 속보’를 통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 포함)과 성과급 200%+100만원이라는 어이없는 제시를 통해 지부 교섭위원들과 5만 조합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조4366억원, 681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45.5%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인 9000억원 안팎을 밑도는 ‘어닝 쇼크’였다. 노조 측은 경제지표(4.7%)와 노동소득분배개선분(0.6%)를 합쳐 기본급 5.3% 인상을 요구했다. 성과급은 2017년 순이익의 30%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3일 특수선 노동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경영 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일한 일부 공무원, 성과제 빌미 쥐”

10년만에 정부와 교섭에 나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과급(연봉)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6월 성과연

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도 성과급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성과급제의 실체는 성과 평가라는 허울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빼앗아 상위 등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신입 시절, 공무원 대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놀랐다”면서도 “나보다 직급이 높은데도 타성에 젖어 일을 대강하다보니, 우리 팀에 발령 받고 와서는 한컴오피스 사용법을 물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었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반면, 똑같은 돈을 받으니 쉬운 일만 하려는 공무원이 있다”며 “성과 측정이 애매해서 문제지만, 타성에 젖은 일부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성과연봉제의 취지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성 지표로 따질 수 없는 대국민 서비스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공무원이 자꾸만 빌미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범홍 기자 joker@metroseoul.co.kr

“乙과의 싸움 원치 않아” 정부에 功 넘긴 편의점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인건비·임차료·출점경쟁 ‘3중고’
5인미만사업장, 지원없이 생존못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을과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하며, 정부와 가맹본부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편의점 가맹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 등 직격타를 맞게 됨에 따라, ‘24시간 운영 점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6일 오전 전편협은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 당 만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가맹 수수료·임차료 그대론데…생존권 위협하는 인건비

편의점 가맹 점주들은 인건비와 임차료, 출점 경쟁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가맹 수수료율은 평균 25%~35% 수준으로, 내년도 월 매출과 판매 이익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점주의 수익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4일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주휴 수당과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셈”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맹 점주의 한 달 수익은 70만원 가량 감소했다. 내년에는 50~60만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와 가맹 본사의 정책 사이에서 인건비 고통까지 감당해야 하는 가맹 점주들로서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익률 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대책 등이다.

협회는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행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을들의 싸움’…정부·가맹본부 대책 보완 필요

이날 전편협은 앞서 제기됐던 ▲공동휴업 ▲심야할증 ▲카드 결제 거부 추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을과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전편협의 요구 사항이 실질적으로 추진 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고, 편의점 업계가 두 차례 성명을 내놓았지만 가맹본부 내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한 본사 관계자는 “가맹 점주와의 소통 채널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은 언제든 열려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GS25 등 각 가맹본부에서 ▲가맹 점주들의 최저 수입 보장 ▲심야시간 운영점포 전기료 350억원 지원 ▲점포 근접 출점 자제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요구 사안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또 다른 본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행,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과거에는 직전 6개월 간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 영업 비용이 이익보다 높으면 심야 영업 중단을 가맹 본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직전 3개월로 기간을 줄였다.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점포의 비중은 전체 업계 평균 10% 정도이지만,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가맹 본부보다 점주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점주들로서는 이 역시 ‘올며 겨자먹기’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협회에서 공동휴업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와 가맹 본부에서 점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선)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민서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